

“총장 선출제 취지는 ‘권력 독점’ 해소하자는 것”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제 논의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가 총장 선출제 논의를 처음 시작한 목적은 ‘모든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것이었으며, 이는 ‘학원의 민주화’라는 이념을 바탕으로 한 구성원들의 투쟁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 24일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경희학원노조) 장백기 위원장과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부 구성원들이 당초 선출제 논의를 시작한 취지를 잊고 제도 마련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입을 모아 지적했다.

경희학원노조와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같은 듯 다른 단체다. 90% 이상의 조합원을 함께 공유하고 있으면서도 경희학원노조는 경희학원에 근무하고 있다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노동조합으로,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의 산별 노동조합으로 존재하는 별개의 조직이다.

앞서 경희학원노조와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기고문을 통해 “대평의를 통한 교수회의의 폭거는 지난 4년 간 대평의 중심으로 이뤄져왔던 총장 선출제 논의와 합의를 전부 부인하는 폭력”이라며 “교수 투표반영 비율은 반드시 50% 미만으로 조정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을 함께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사실 지금 논의하는 안은 ‘총장 선출제’가 아닌 ‘총장 후보자 선출제’이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수회의는 비민주적으로 기존 합의를 뒤집고 모든 구성원의 의사를 무시하여 독재자를 내세우려 한다”며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인터뷰 동안 양 대표는 다소 이견을 보이는 와중에도 성숙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끊임없이 소통에 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 위원장은 “갈등과 반목은 생길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역행이 아닌, 성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현재 총장 선출제를 바라보는 각 구성원들의 관점이나 지향점에서 많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좌)과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우)는 지향해야 할 가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일부 구성원들이
당초 선출제 논의를
시작한 취지를 잊고
제도 마련 그 자체에만
집착하고 있다

”

은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며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자꾸만 생략되고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박 지부장 또한 “바람직한 총장상에 대한 속의 과정이 마련될 필요도 있다”며 “형식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이르는 과정이나 내용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총장 선출제 마련의 취지가 ‘권력 독점의 해소’라는 목적과 어긋나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전에는 교수가 대학의 총장이 되어야만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도 했지만 이제 교수는 단지 직업인에 불과하다”며 “이미 존중하는 의미에서 구성원들이 크게 양보해 53% 가량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수회의가 그보다 높은 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선출제를 마련하는 취지에서 한

참 벗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교수회의 강재식 의장은 “지난 5월 14일, 15일 양일 간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75%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과 관련해 ‘대평의에서 논의하고 확정된 비율을 고수해야 한다’ 또는 ‘총장 선거를 성사시키기 위해 비율을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를 선택하는 전자 투표를 실시했다”며 “개표 결과, 기존 대평의 선출규정대로 75%의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고수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지난 20일 열린 제2차 전체 임시대의원회에서 이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조사 결과, 총 응답 대상 1,321명 중 701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4.9% 가량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된 교수 투표반영 비율(75%)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경희학원지부는 논평을 통해 “똑같은 설문 조사를 학생들

과 직원들에게 실시했다고 가정했을 때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원상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인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학생과 직원들은 더욱 그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교수들과 가열차게 대립할 것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우리학교 교원들 중 아직 양심을 지키고 있는 이들이 존재한다는 희망을 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 지부장은 자체 설문 조사 결과를 통해 교수회의가 밝힌 입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절반 가량이 응답하지 않았으며, 교수 투표반영 비율을 양보해야 한다고 응답한 교수가 35%에 이른다는 점에서 교수회의가 의도했던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 속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교수회의가 설문 조사를 통해 교수 전체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 위원장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총장 선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총장 선출제는 모든 구성원, 나아가 경희를 존중하는 시민 사회까지 선거에 참여하는 1인 1표제가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경선제와 같은 제도를 갖추어서 경희가 총장 선출의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 달째 구성원들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두고 장 위원장은 법인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이번 논란으로 인해 총장 선출제 논의가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이라며 “총장 직무대행 체제의 어려움을 지속할 수 없는 법인이 구성원들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다고 판단해 기존처럼 총장을 선임하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법인이 당초 총장 선출제 논의를 시작했던 목적과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는 점에 비취할 때, 다른 대학의 법인처럼 일부러 구성원 갈등을 조장하거나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비추며 “구성원들이 반드시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약속과 함께 의견 조율 과정을 기다려달라고 법인을 설득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가치...이해 관계 벗어나야”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

김지원 기자 kjw990327@khu.ac.kr

“투표반영 비율은 사실상 구성원 단체 간 이해관계를 푸는 일이며, 정책이나 비전과 같은 가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경희민주총동문회(민주동문회) 김재운 회장은 현재 총장 선출제 논의 상황을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일부 사안에 대해선 합의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며 “그중에서도 요즘 가장 부각된 것이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에 관한 문제”라고 정리했다.

김 회장은 현 사태를 두고 “이해관계에만 얽매어서 더 큰 틀에서의 담론과 가치를 지향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민주동문회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가치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숫자보다는 가치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가치 중심의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의 투표 방식은 자칫 인기투표로 변질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김 회장은 “가치 중심의 선거를 위해서는 ‘공론화 방식’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후보

자들이 각자의 이상과 가치, 비전 등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이 토의를 진행해 후보자를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을 도입하면 논의 과정에서는 누가 되느냐가 아닌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가 고려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총장을 뽑을 수 있다는 것이 김 회장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공론화 방식은 민주동문회가 총장 선출제 논의에 품은 청사진일 뿐 이를 당장 도입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김 회장은 “총장 직무대행 체제가 5개월 넘게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권력 공백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완벽한 제도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논란의 중심인 투표반영 비율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범대위에서 지난해 12월 4일 합의한 구성원 투표반영 비율은 구성원들이 합의를 이뤘다는 맥락에서 존중하지만 동문 비율을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동문이 가진 한 표와 학생이 가진 한 표의 가치가 동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동문으로서 모교에 좋은 소식이 있으면 기쁘고 나쁜 소식



이 있으면 속상하지만 학교에 발생하는 일이 동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를 밝혔다. 투표비율에 각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비중, 중요도, 영향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김 회장은 “연구와 강의

라는 대학의 본질에 닿아있는 동시에 학교가 직장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수의 비중이 커야 한다는 주장은 이해한다”라면서도 “어느 한 집단의 결정이 과도한 영향력을 미쳐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교수회의가 주장하는 75%의 투표비율은 사실상 절대적인 영향력

을 가질 수 있어 직선제를 채택한 것을 무의미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는 “교수회의 75% 주장은 욕심이 과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직선제 취지를 살리고 민주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교수들의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앞서 제시한 두 가지 문제의식 해결을 위해서는 투표반영 비율은 투표율과 연동하여 조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며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교수, 학생, 직원은 직선제를, 동문은 간선제로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민주라는 가치에 빛들어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동문회는 1인 1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회장은 “가치 중심의 논의와 설득, 수용의 과정으로 훌륭한 제도가 완성될 수 있다”며 “자신의 입장을 무조건 관철시키려 하거나 상대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마찬가지로 “구성원들은 이번 총장 선출제를 통해 무엇을 얻고 어떻게 발전해나갈 것인지를 고민해야지 이해라는 협소한 가치를 두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총장 선출제를 바라봐야 함을 역설했다.